

12대 핵심재정사업, 내년 예산에 중점 반영

- 최상대 차관, “금년 하반기 내수 및 민생에 중점을 둔 재정운용 필요”
- 재정비전 2050,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후 하반기 중 마련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14(수)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①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②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였다.

최 차관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향후 재정을 중점 투자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의 전(全)주기에 걸쳐 '27년까지 5년간 지속해서 밀착·집중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강조하였다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지난 3월부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사업 추진상 장애 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 재정투자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해 왔다.

그간의 작업반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핵심재정사업별 중간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중점 반영할 계획이며, 최종보고서는 지속적인 작업반 논의, 정책수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서 최 차관은 최근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기정예산 중 필요한 재정지출을 차질없이 뒷받침 하면서 특히, 내수 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날 참석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혁신 노력에 공감하면서 「재정비전 2050」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최상대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면서,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충실히 거쳐 하반기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오기남 (044-215-5720)
		담당자	사무관 김민호 (jadelake@korea.kr)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유형선 (044-215-5310)
		담당자	사무관 이재학 (sljh999@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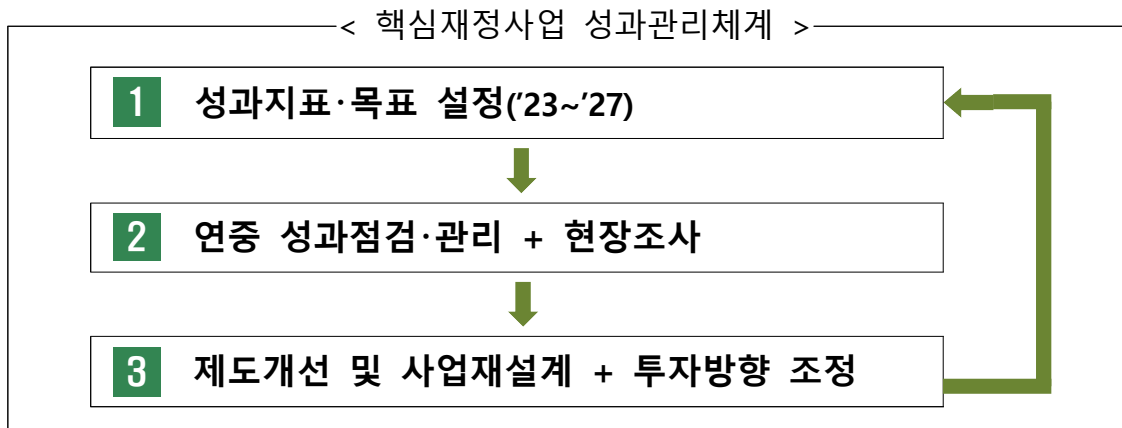
참고 1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주요내용

< 제도 개요 >

- 금년부터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하여
 쫄주기적으로 밀착·집중 관리 → 5년간 가시적 성과 창출 추진

* 재정이 수반되는 주요 대통령 과제(Presidential Agenda) 선정·관리



< 추진경과 및 진행상황 >

- (추진계획 수립·구체화)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설정(국무회의
 보고, '22.8, '23.1) 및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재정운용전략위, '23.1)
- (추진·점검체계 구축·운영) 사업별 민간전문가 작업반 논의 및 중간
 보고서 작성(5월말) + 관계부처 성과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 점검
- (현장점검) TIPS 프로그램 관련 TIPS 타운 현장방문 및 스타트업 대표
 등과의 현장 간담회 개최(4.20, 서울 TIPS 타운)

< 향후 추진계획 >

- ('24년 예산편성 환류) 작업반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사업별
 중간결과 예산실 송부(5월말) → '24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 추진
- (작업반 보고서 수정·보완) 설문조사·분석, 심층면접, 전문가 세미나
 등을 거쳐 보고서 수정·보완 → 12월경 최종보고서 작성

< 12대 핵심재정사업(군) 세부현황 >

서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 취약근로자(예술인·특고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②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 장애인 돌봄
(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③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지원
(청년도약계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④ 생활물가 안정 지원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⑤ 지역 균형 발전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방안 포함

미래 대비 ·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지원

⑥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 차세대반도체 R&D ※ 과기부 주관 평가
 - AI반도체 사업화지원

⑦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 차세대원자력 및 양자 분야
기술개발 ※ 과기부 주관 평가

⑧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 공급망 핵심품목생산기반
구축 강화(유턴기업, 외투기업 지원)

⑨ 중소벤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창업성장기술개발(TIPS) 및
민관협력창업육성

국민 안전 · 글로벌 리더 국가 책임 강화

⑩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 산불 대응능력 강화

⑪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훈 실현

-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병 봉급, 급식, 숙소, 사회진출지원금)

⑫ 국격·외교 역량 강화

- 기후변화 대응 ODA 사업
※ 국조실 주관 평가

참고 2

핵심재정사업별 주요 논의내용

①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틱스 프로그램 (중기부)

- (의의) 틱스(TIPS)는 대표적인 민간주도의 벤처·스타트업 지원사업
 - 민간이 선별한 유망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계 지원(민·관 협력)
 - * 先민간투자(1~2억원) + 後정부지원(R&D 5억원, 사업화 1억원, 해외마케팅 1억원)
- (성과지표·목표) R&D·사업화·마케팅 지원 → 후속투자유치 + 고용창출
 - 후속투자 유지율 : ('22) 35.2% → ('23) 38.2% → ('27) 55.0%
 - EXIT 틱스기업수* : ('22) 15개 → ('23) 17개 → ('27) 27개
 - * 틱스 지원기업 중 IPO(기업공개) 또는 M&A 성공 기업수
- (제도개선) 벤처·스타트업의 R&D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적기 자본 공급 지원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 (재정투자방향)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틱스 프로그램 중점 투자
 - 국정과제 계획 등에 따라 틱스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②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 외투기업 및 유턴기업 지원 (산업부)

- (의의) 코로나19, 러-우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 →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아시아의 대안 투자처로 부상
 - ⇒ 외국인투자(FDI) 및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
 - * 외투기업 및 유턴기업의 입지·설비 투자 등에 대해 현금 지원
- (성과지표·목표) 외투기업·유턴기업 지원 → FDI 및 유턴기업 확대
 - 현금지원기업 FDI 실적 : ('22) 380 → ('23) 385 → ('27) 414백만불
 - 유턴 선정확인 기업수 : ('22) 126개 → ('23) 141개 → ('27) 214개
- (제도개선) 외투 현금지원 및 유턴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지원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 검토
- (재정투자방향) 재정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첨단전략산업 등 핵심 공급망 관련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자

③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 AI반도체 사업화 지원 (과기부)

- (의의) 전 산업분야 AI기술 확산에 따라 AI반도체 시장이 급성장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선도국과 기술 및 시장 측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
⇒ AI제품·서비스에 AI반도체를 적용하기 위한 실증 지원 강화
- (성과지표·목표) AI반도체 실증 지원 → 사업화 + 실증 레퍼런스 확보
 - AI반도체 사업화 성공율 : ('22) 33 → ('23) 41 → ('27) 75%
 - AI반도체 실증레퍼런스 확보건수(누적) : ('22) 6 → ('23) 14 → ('27) 46개
- (제도개선) AI반도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실증 지원 및 사업화 확대, 사업화 이후 국내시장 진입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 (재정투자방향) AI반도체 시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원 분야·과제수 확대 등 실증 지원 규모 확대 검토

④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부)

- (의의) 전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의 핵심은 인재 확보이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현장인력은 초과수요 상태
 - *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수요는 12.7만명, 연간 인력 공급은 5천명 수준
- (성과지표·목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 학사급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 반도체특성화대학 반도체분야 취업·진학률 : ('25) 20 → ('26) 40 → ('27) 60%
 - * '23년 신규사업으로 취업 및 대학원 진학률은 '25년부터 측정 가능
- (제도개선) 반도체특성화대학과 관련 대학원*간 진학 연계 강화, 기자재 구입·활용 쏠주기 관리 강화 및 연구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 * 반도체특성화대학원(산업부), AI반도체대학원(과기부) 등
- (재정투자방향) 반도체 산업인력 초과수요 상황 등을 감안,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반도체 인력양성 적극 지원

⑤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 장애인 돌봄 (복지부)

- (의의) 장애인구 고령화, 1인가구·발달장애 증가 등에 따라 장애인 돌봄 수요 증가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생활 및 돌봄부담 완화 지원
- (성과지표·목표) 장애인 돌봄 서비스·인프라 확충 → 수급자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수 : ('23) 15만명 → ('27) 17만명 수준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수급자수 : ('23) 2만명 → ('27) 3만명 수준
- (제도개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AI, IoT 등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 기반 디지털 돌봄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통한 개인 선택권 강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24시간 돌봄 등 서비스 확대·다양화 등
 - ** (예) 배설보조·식사보조 로봇, 휠체어 주행 보조 AI 시스템 등
- (재정투자방향)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초과수요에 대응하여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정투자 단계적 확대 추진

⑥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 청년도약계좌 (금융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부)

- (의의) 청년이 일을 통한 자산형성으로 주거·교육·문화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도록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및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 (성과지표·목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및 청년도약계좌 지원 → 취업애로청년 채용 및 청년 자산형성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 취업애로청년수 : ('23) 72 → ('24) 72천명
 - 청년도약계좌 1인당 연평균 납입액 : 440만원
- (제도개선)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촉진 및 중도해지 방지 방안 등 검토
- (재정투자방향) 최근 청년 고용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청년이 장기 실업에 빠지지 않도록 청년 노동시장 진입 적극 지원
 -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률 및 중도해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도 적극 지원 검토

7 생활물가 안정 지원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농식품부·해수부)

- (의의)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와 온난화·한파 등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 ⇒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가격 할인 지원
- (성과지표·목표) 농축수산물 소비자 구매가격 정부 직접 할인 + 민간 유통업체 자체할인 촉진 →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
 - 소비자 할인 수혜금액 비율* : ('22) 147.1 → ('23) 151.1 → ('27) 159.8%
 - * 소비자가 할인받은 금액(유통업체 정가-실제소비자 구매가)/할인지원사업 예산
- (제도개선) 민간 유통업체 자체할인 참여 확대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소비자 할인가격 조사체계 마련 등 제도개선 검토
- (재정투자방향) 물가 상황, 한시사업('20~'23)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인지원사업 지속 추진 여부 및 투자규모 검토

8 지역균형발전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교육부)

- (의의)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지역대학·지역의 공동위기 가속화
 - ⇒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 *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 등이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운영
- (성과지표·목표) 지역 내 취창업자수(플랫폼당)
 - : ('22) 407 → ('23) 420 → ('27) 500명
- (제도개선) 현행 지역협업위원회의 정책 기획 역할 강화 및 RIS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적 참여 확대 등 RIS사업 추진체계 정비 검토
 - '25년부터 RIS 등 5개 대학지원사업 통합 및 RISE*체계 도입 추진
 - * 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재정투자방향) '23~'24년간 RISE 시범지역 운영 후 '25년부터 RISE체계(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되,
 - 성공적인 RISE 체계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방식·규모·체계 등 사전검토

9]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부)

- (의의) 고용취약계층 및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회보험 가입 저조
 - ⇒ 실질적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예술인·특고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미가입자의 사회보험 가입 유도
- (성과지표·목표) 고용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 가입 확대
 -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 ('22) 68.1 → ('23) 69.1 → ('27) 73.1%
 -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률
: ('22) 75.8 → ('23) 76.8 → ('27) 80.8%
- (재정투자방향)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예술인·특고에 대해 사회보험료 적극 지원

10]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 산불대응능력 강화 (산림청)

- (의의) 산불 발생 상시화·대형화 추세 → 산불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대응능력 강화 필요
- (성과지표·목표) 산불 건당 피해면적
: ('22) 32.8 → ('23) 9.0 → ('27) 7.9ha
- (제도개선) 산불 예방 및 신속 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 산불핵심원인* 근절 및 과학기반 디지털 산불대응체계** 구축
 - *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에 대응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확대 추진
 - ** AI 기반 실시간 산불감시가 가능한 산불방지 ICT 플랫폼 구축 등
 - 한전·환경공단 등 산불 관련 공공기관 연계 활용* 강화
 - * (예) 한전 : 송전선·전신주 등 안전관리 강화(산불위험목 제거) 등
- (재정투자방향) 산불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 * 과학기반 산불대응체계 구축, 초대형헬기·임도 확충,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확대

11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훈 실현 : 군장병 근무여건 개선 (국방부)

- (의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 열악한 군간부 주거여건 개선, 양질의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군복무 만족도 및 사기 제고
- (성과지표·목표)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비율, 관사·간부숙소 보유율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납입가능금액 대비 평균 납입액 비율
: ('22) 91% → ('23) 93% → ('27) 97%
 - 국민평형관사 보유율 : ('22) 21.2% → ('23) 21.8% → ('27) 28.0%
 - 1인 간부숙소 보유율 : ('22) 94.4% → ('23) 96.8% → ('27) 100%
- (제도개선)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급식 질 개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급식·조달체계 개선 등 검토
- (재정투자방향) 군 복무 보상 및 관사·간부숙소 등 처우 개선에 중점 투자
 - 기수립된 투자계획*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정투자 확대
 - * 예 : (병인건비+사회진출지원금) '22년 월 82만원 → '25년 월 205만원 수준
(병장 기준)으로 확대
 -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시범 실시중인 군급식 민간위탁은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후, 효과성·운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사업 여부 결정